

ISSN: 2800-051X

HankookResearch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344-1호)

여론속의 여輿論論

[기획] 사후 디지털 정보도 상속이 될 수 있을까?
- 디지털 유산 관련 인식

2025. 8. 20.

담당자 김지은 책임연구원
전화 | 02-3014-1055
e-mail | je.kim@hrc.co.kr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정가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정가지표는 국가, 사회,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운영책임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연구진

이소연 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저작권 정책

-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텍스트, 차트 및 그래프)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별도의 저작권 표시 또는 다른 출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한국리서치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무단 복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의 지적재산권침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는 (주)한국리서치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물입니다. 출처를 명기하지 않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므로 위 행위자에 대해 해당 법률에 따른 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로 연결되도록 링크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처는 반드시 명기하여야 합니다.
-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본 보고서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용은 저작물의 일부분에 한정되어야 하며, 전체 내용의 10% 이상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저작권 침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복제가 가능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로 수익을 얻거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한국리서치와 사전에 별도의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허락을 얻어 자료의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출처가 (주)한국리서치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오류 정정 이외에 내용의 무단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사후 디지털 정보도 상속이 될 수 있을까? - 디지털 유산 관련 인식

주요 결과

- 오늘날 우리는 이름뿐 아니라 생전의 디지털 정보까지 남기는 시대에 살고 있다. SNS 게시물, 사진, 영상, 각종 온라인 계정 등 고인의 온라인 기록은 사망 이후에도 그대로 남아있다. 이러한 '디지털 유산'은 새로운 문제가 되고 있다. 디지털 유산을 규율할 법과 제도가 미비하고, 처리 방식에 대한 논의도 부족하다. 유족들은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고, 플랫폼 기업들도 각자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팀은 5월 23일~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유산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는 조사를 진행했다.
- 디지털 유산의 개념 인지도는 39%로, '대략적인 의미를 안다'가 34%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개념을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5%에 불과, '전혀 들어본 적 없다' 응답도 27%로 적지 않다.
- 가치 있는 디지털 자산으로 '사진·영상·문서 등 개인 보관 콘텐츠(51%)'를 꼽은 비율이 '온라인 포인트·게임 아이템·가상자산 등 디지털 경제자산(24%)' 대비 두 배 이상 높다.
- 디지털 유산 역시 물질적 자산처럼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64%)고 인식한다. 70대 이상 고령층에서도 절반 이상(51%)이 동의한다.
- 디지털 자산을 '삶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85%)이자 '사망 이후에도 가족에게 기억의 자산'(68%)으로 인식하는 동시에 '가족이나 지인이 내 디지털 기록을 열람하거나 보관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응답도 절반 이상(53%)이다.
- 모든 디지털유산 항목에서 '내가 사망했을 때 남기고 싶다'는 응답(상속 의향)이 '사망한 가족으로부터 받고 싶다'는 응답(수령 의향)보다 낮다.
- 해외 일부 국가에서 도입 중인 '생전 자기결정권'이 국내에도 필요하다는 데에 75%가 공감하며, 응답자 3명 중 2명은 향후 직접 실행할 의향(66%)이 있다.

1

디지털 유산에 대한 인식

10명 중 4명, 디지털 유산 '알고 있다'... 잘 안다 5%, 대략적 의미 안다 34%

현재 우리나라에는 관련 법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디지털 유산'은 사망 이후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 디지털 공간에 남겨진 개인의 흔적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디지털 유산의 개념을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의 39%이다. 이 중 '대략적인 의미를 알고 있다'는 응답이 3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개념을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5%에 불과하다. 한편 '전혀 들어본 적 없다'는 응답도 27%로 적지 않다. 세대별 인식 차이는 크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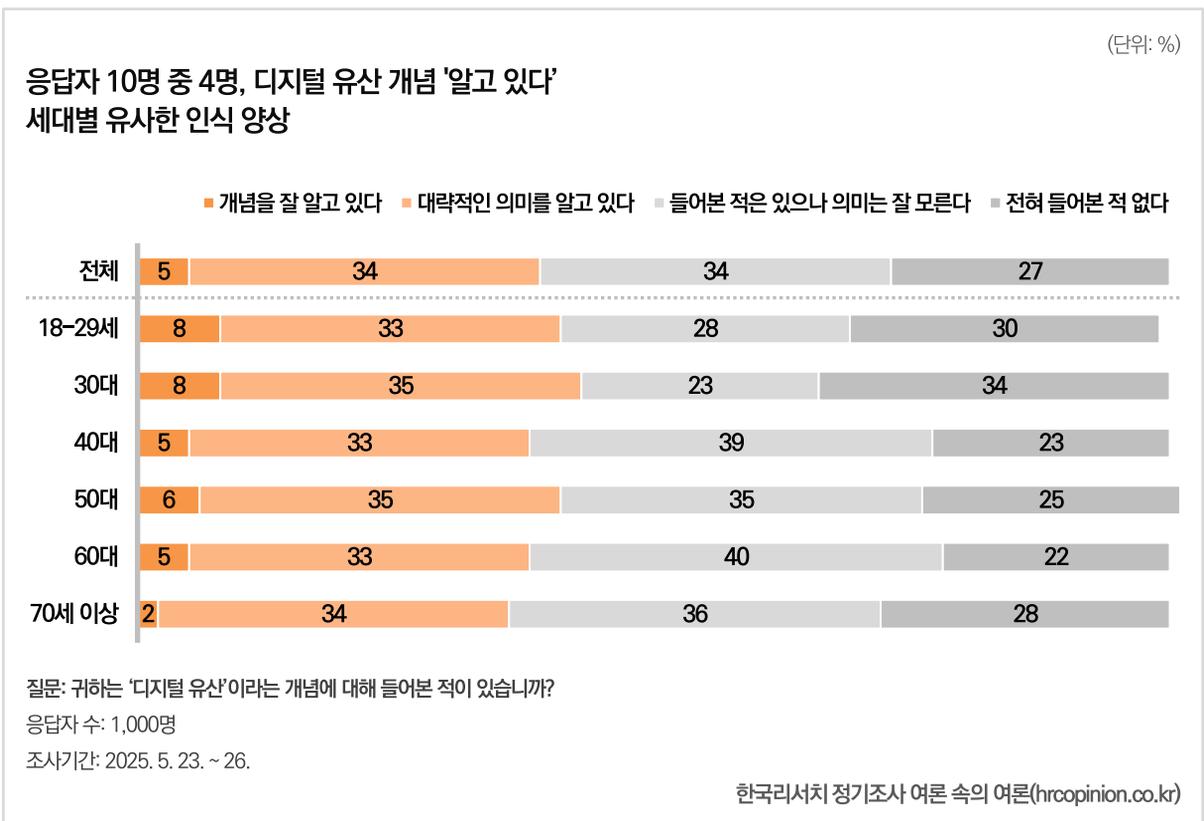


사진 등 개인 콘텐츠는 디지털 유산 80%, 디지털 경제자산 64%, 온라인 계정은 62%만 디지털 유산으로 인식

디지털 유산을 구성하는 유형에 대한 인식은 항목별로 차이를 보인다. 어떤 항목이 디지털 유산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사진·영상·문서 등 개인 보관 콘텐츠(80%)'를 가장 대표적인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다. '개인 메신저 대화 기록(64%)', '디지털 경제자산(64%)', '공개된 콘텐츠(62%)', '온라인 계정(62%)'이 그 뒤를 잇는다.

실제 디지털 유산에 포함되는 모든 항목을 보기로 제시했음에도 인지도에서 차이가 있다. 온라인 계정 자체에 대한 인식은 콘텐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포인트나 게임 아이템 등 금전적 성격의 디지털 경제자산 인식도 60%대에 그친다. 경제적 자산보다 기록 및 정서적 의미를 지닌 콘텐츠를 디지털 유산으로 좀 더 인식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모두 디지털 유산에 해당함에도, 항목별 인식에는 차이 있어
 80%가 개인 보관 콘텐츠를 디지털 유산이라고 인식
 메신저 대화 기록, 디지털 경제자산, 공개 콘텐츠, 온라인 계정보다 높아

(단위: %)



질문: 귀하는 '디지털 유산'의 범위에 어떤 항목이 포함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비고: 복수응답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5. 23. ~ 26.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디지털 자산, 정서적·기록적 가치가 경제적 가치보다 우선

가치 있는 디지털 자산을 묻는 질문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영상·문서 등 개인 보관 콘텐츠'가 가치 있다는 응답이 51%로 '온라인 포인트·게임 아이템·가상자산 등 디지털 경제자산(24%)' 대비 두 배 이상 높다. 특히 보기로 제시한 항목 중 '디지털 경제자산'이 가치 있다는 응답이 가장 낮다. 현실에서의 물질적 상속이 주로 경제적 가치에 초점을 두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온라인에서의 디지털 상속은 개인의 기록물이나 정서적 의미를 더 중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치가 있는 디지털 자산,
 '사진·영상·문서 등 개인 보관 콘텐츠' 51%, '디지털 경제자산'은 24%

(단위: %)



질문: 아래의 디지털 자산 중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최대 2개까지 선택해 주세요.

비고: 복수응답, 1+2순위 합계

응답자 수: 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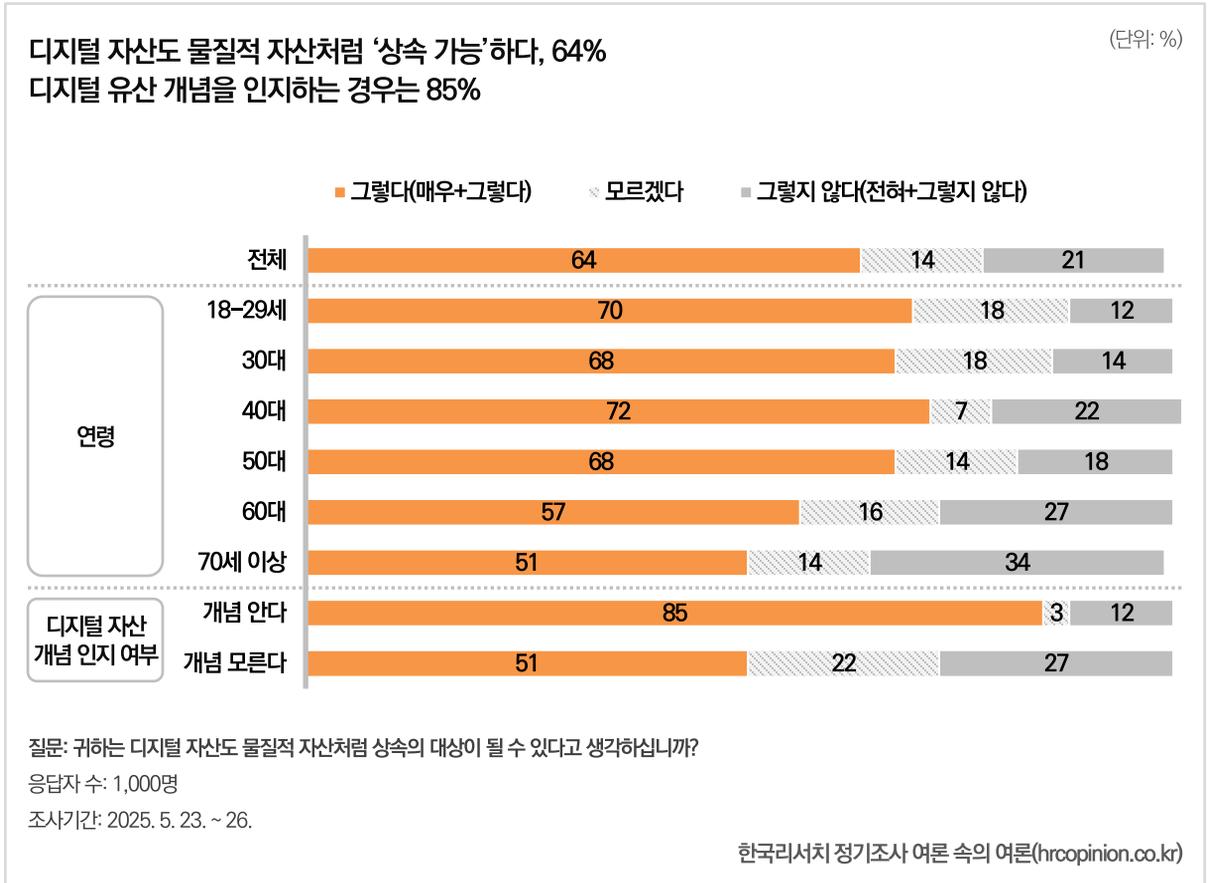
조사기간: 2025. 5. 23. ~ 26.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64%가 디지털 자산도 ‘상속의 대상’으로 인식

디지털 유산을 상속 가능한 자산으로 받아들이는 인식도 확인된다. 전체 응답자의 64%는 디지털 유산 역시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20·30대에서 각각 70%, 68%로 높고, 70대 이상 고령층에서도 절반 이상(51%)이 동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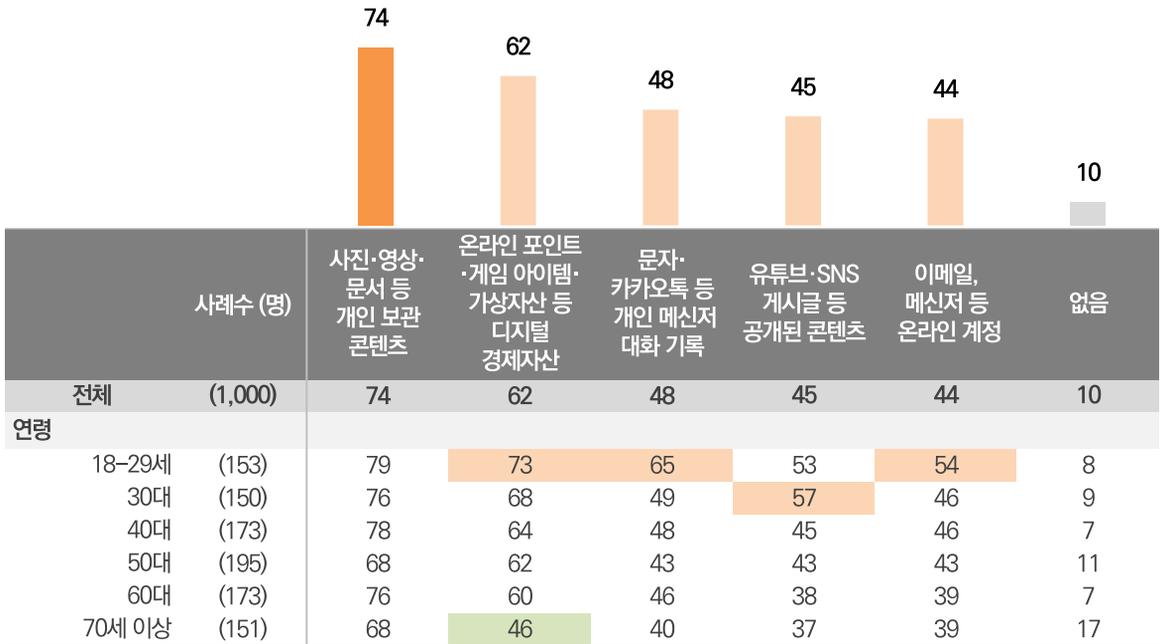
상속 인식은 디지털 유산의 개념을 아는지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개념을 알고 있는 응답자 중에서는 85%가 디지털 유산이 상속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답한 반면, 개념을 모르는 응답자 중에서는 51%가 상속 대상이라고 답해 격차가 크다.



구체적으로 상속 또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을 살펴보면 ‘사진·영상·문서 등 개인 보관 콘텐츠(74%)’가 가장 높다. 이어서 ‘디지털 경제자산(62%)’, ‘개인 메신저 대화기록(48%)’ 등의 순이다. 모든 항목에서 최소 40%를 넘는 가운데 세대 간 인식 차이는 뚜렷하다. 18-29세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과반 이상이 상속 또는 관리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지만 70세 이상에서는 ‘개인 보관 콘텐츠’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상속 또는 관리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더 높다. 특히 70세 이상 응답자의 17%는 상속 또는 관리가 필요한 항목이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단위: %)

디지털 유산으로 상속이 필요한 항목, '개인 보관 콘텐츠'(74%) 및 '디지털 경제자산'(62%)



질문: 다음 중 디지털 유산으로 상속 또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비고: 복수응답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5. 23. ~ 26.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2

디지털 유산을 둘러싼 인식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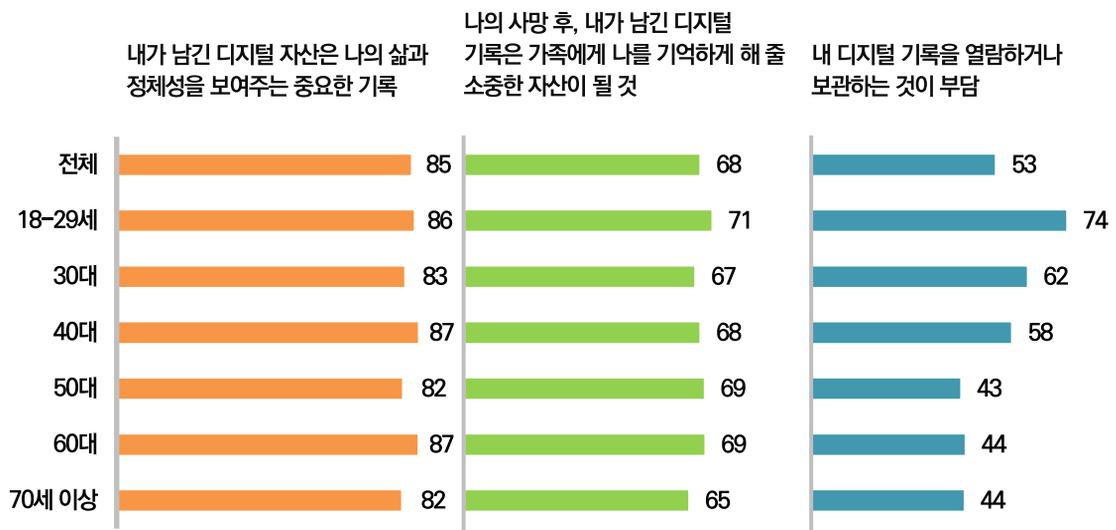
남기고 싶은 기록-감추고 싶은 사생활 사이의 경계

이처럼 디지털 유산을 상속 가능한 자산으로 보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개인의 감정과 태도는 복합적이다. 응답자 10명 중 8명 이상(85%)은 디지털 자산이 '자신의 삶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이라고 인식한다. 68%는 자신의 디지털 기록이 '사망 이후에도 가족에게 기억의 자산으로 기능'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가족이나 지인이 내 디지털 기록을 열람하거나 보관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응답도 53%로 절반을 차지한다. 디지털 유산을 둘러싼 공유의 의미와 사생활 보호의 관점이 충돌하는 것이다.

이러한 심리적 거리감은 2·30대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기록을 의미 있게 남기고 싶어 하면서도, 그 흔적이 어떻게 해석되고 누구에게 전달될지는 통제하고자 하는 양면적 태도를 반영하는 결과로 풀이된다. 따라서 이러한 간극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라 할 수 있다.

개인의 중요한 기록이자 가족의 기억으로써 디지털 유산의 가치에 공감하나, 동시에 공유에 대한 우려도 존재

(단위: %)



질문: 다음 중 귀하는 다음 의견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비고: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렇다) 응답만 제시함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5. 23. ~ 26.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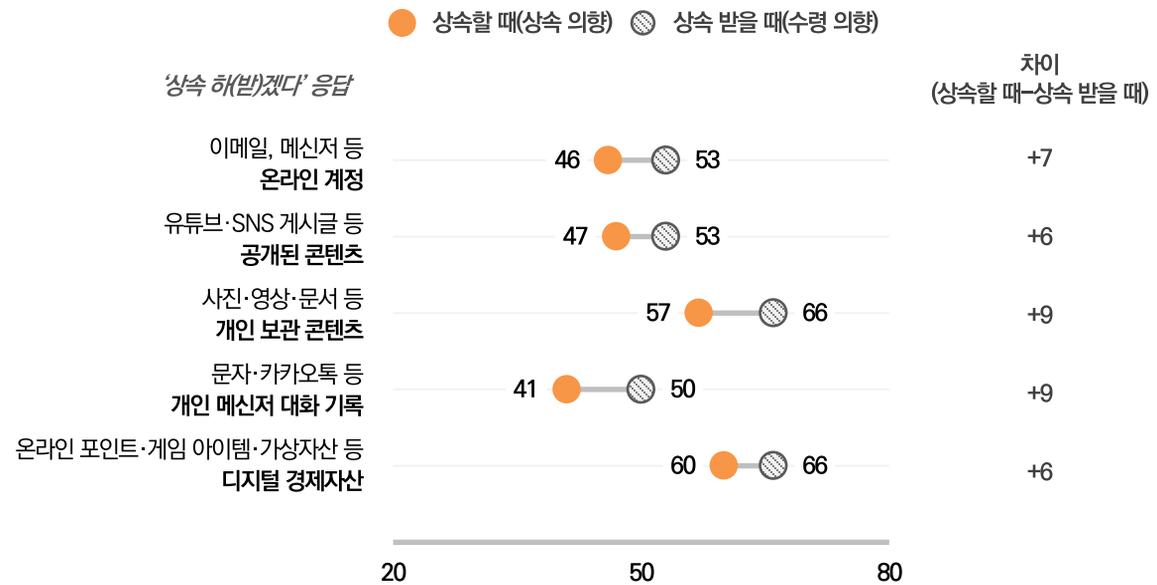
상속할 때-상속 받을 때, 입장에 따른 차이 보여

디지털 유산을 둘러싼 또 다른 갈등은 기억을 남기는 사람과 물려받는 사람 간 인식의 불일치에서 비롯된다. 사후 남겨진 흔적은 유족에게는 소중한 기억이자 자산이 될 수 있지만, 당사자에게는 남기고 싶지 않은 민감한 정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에서도 이러한 인식의 간극이 드러난다. 디지털 유산의 각 항목에 대해 ‘내가 사망했을 때 남기고 싶다’는 응답(상속 의향)과 ‘사망한 가족으로부터 받고 싶다’는 응답(수령 의향)을 비교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수령 의향이 상속 의향보다 높다. ‘디지털 경제자산’은 상속 의향(60%)과 수령 의향(66%)이 모두 높아 격차가 크지 않으나, ‘사진·영상·문서 등 개인 보관 콘텐츠’는 수령 의향(66%)에 비해 상속 의향(57%)이 낮아 상대적으로 인식 차가 크다.

(단위: %)

디지털 유산 상속할 때 vs 상속 받을 때 입장에 따른 차이 물려줄 의향보다 물려받고 싶은 의향이 더 높아



질문: 상속할 때 - 귀하는 본인의 사망으로 인해 나의 디지털 유산을 상속하거나 관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가까운 입장을 선택해 주세요.

상속 받을 때 - 귀하는 가족이나 지인의 사망으로 인해 그들의 디지털 유산을 상속받거나 관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가까운 입장을 선택해 주세요.

비고: 상속하고 싶다(소중한 기록이자 자산이므로 가족이나 지인에게 적극적으로 상속하고 싶다+중요한 정보나 자산에 한해서 상속하고 싶다), 상속받고 싶다(소중한 기록이자 권리라고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상속받고 싶다+유용한 정보나 자산이 있다면 상속받고 싶다) 응답만 제시함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5. 23. ~ 26.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3

제도적 대응 방향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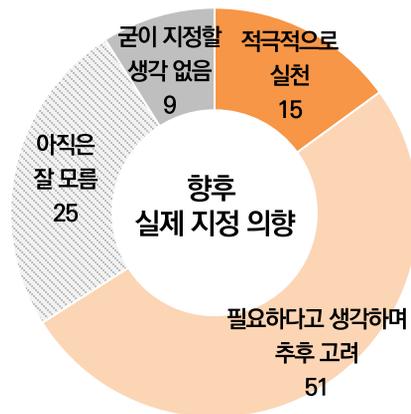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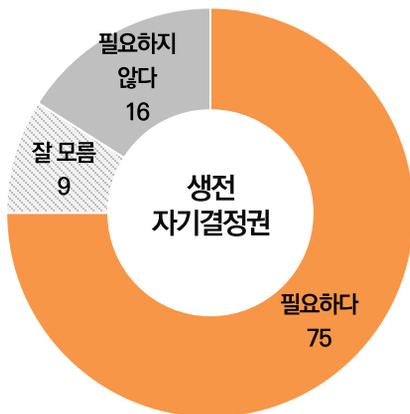
생전 자기결정권 필요성과 향후 실행 의향 모두 높아

디지털 유산을 둘러싼 복합적인 쟁점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는 생전에 본인이 처리 방식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유산을 정리하거나 위임함으로써 사후 갈등을 줄이는 방식이다.

이번 조사에서도 생전 자기결정권에 대한 공감대가 높게 나타난다. 전체 응답자 중 75%가 ‘생전에 디지털 유산의 처리 방식이나 지정인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하며, 66%는 이를 직접 실행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적극적으로 실천 15%+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추후 고려 51%).

(단위: %)

생전 자기결정권 필요성과 실행 의향 모두 높게 나타나
 생전 자기결정권 ‘필요하다’ 75%, 향후 실제 지정할 ‘의향 있다’ 66%



질문: 생전 자기 결정권 - 귀하는 본인의 디지털 유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생전에 미리 정리하거나 지정인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향후 실제 지정 의향 - 귀하는 향후 본인의 디지털 유산을 생전에 정리하거나 사망 이후 어떻게 처리할지 지정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비고: 필요하다(매우+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다(전혀+별로) 응답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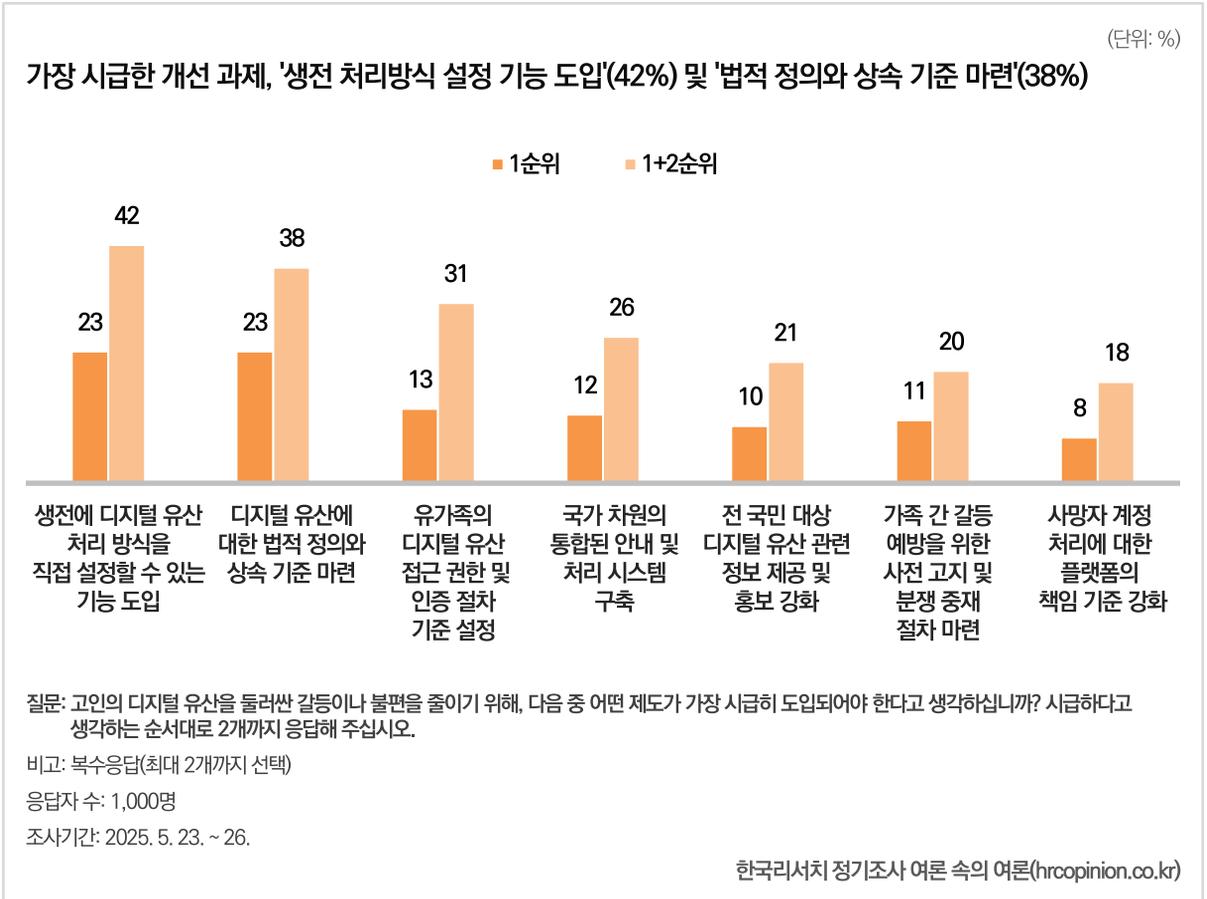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5. 23. ~ 26.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디지털 유산 처리 방식 생전 설정 기능과 법적 기준 마련 시급

이러한 인식은 구체적인 정책 수요로도 이어진다. 디지털 유산 관련 가장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정책으로 '생전에 유산 처리 방식을 직접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의 도입'과 '법적 정의 및 상속 기준 마련'이 각각 23%로 가장 많다(1순위 응답 기준). 다음으로 '유가족 접근 권한 및 인증 절차 기준 설정'(13%), '국가 차원의 통합된 안내 및 처리 시스템 구축'(12%) 등이 뒤를 잇는다. 디지털 유산과 관련된 법·제도적 공백을 메우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함을 보여주는 결과다.



디지털 유산은 단순한 정보의 집합이 아니라 개인의 삶이 담긴 소중한 흔적이자 타인과의 관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체이다. 때문에 그 처리 방식이 사회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 비해 디지털 유산을 뒷받침할 법·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꾸준히 발의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법제화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 디지털 유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상속 자산으로 인식하는 변화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이제는 개인이나 플랫폼의 자체 규정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디지털 유산의 법적 정의와 상속 기준을 마련하고, 개인의 생전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조사개요

구분	내용
모집단	•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표집틀	•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5년 4월 기준 전국 97만여 명)
표집방법	•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 1,000명
표본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1\%p$
조사방법	•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5년 3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응답율	• 조사요청 38,424명, 조사참여 1,624명, 조사완료 1,000명 (요청대비 2.6%, 참여대비 61.6%)
조사일시	• 2025년 5월 23일 ~ 5월 26일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論論

Hankook Research

